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시화나래초등학교

## 가.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폐습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2016년 9월 28일)

## 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하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함.

## 다. 당부의 말씀

본교와 학부모님들께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으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향후 법 위반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본교 교직원 모두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학부모님께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과 밝고 맑은 미래를 위해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라. 신고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처]**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85(익명신고)

## ☐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

<p>Q1 특정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학부모) 간, 학급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학부모) 간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p> <p>A1 과목 선생님,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타 학교로 전출을 갔거나,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p>	<p>Q2 <u>스승의 날에 교사 甲이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은 경우</u></p> <p>A2 “학생대표등” 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u>허용</u>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음</p>
<p>Q3 교사 甲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u>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 A로부터 2만원짜리 카카오톡 음료쿠폰을 받은 경우</u></p> <p>A3 학부모 A의 음료쿠폰 선물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u>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됨</u></p>	<p>Q4 <u>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u></p> <p>A4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u>허용될 수 없음</u></p>
<p>Q5 입학식 및 졸업식때 학부모회 회장이 화환을 보냈을 경우</p> <p>A5 공식행사시 유관기관의 장 등이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일정 사회상규에 해당하나, 학부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가 화환을 보내는 것은 이 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p>	<p>Q6 교사 甲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 B의 부모 A가 찾아와 상담을 하다가 식사시간이 되어 학생 B의 부모 A가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산 경우</p> <p>A6 학부모 A의 식사 접대에 대해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A가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됨</p>
<p>Q7 학급회장 어머니 A가 담임 선생님 甲에게 수학 여행을 가서 학급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사 드시라고 하면서 50만원을 전달한 경우</p> <p>A7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甲은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징계대상, A는 공직자등인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됨</p>	<p>Q8 <u>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한 경우</u></p> <p>A8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 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u>허용되지 않음</u></p>
<p>Q9 <u>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경우</u></p> <p>A9 졸업식 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u>허용</u>되는 금품 등에 해당됨</p>	<p>Q10 <u>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u></p> <p>A10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u>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u></p>

##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시화나래초등학교

1.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 안내 >

031-249-0999 / e-mail : [hotline@goe.go.kr](mailto:hotline@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 관계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내 용 :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비밀보장 대상 및 벌칙사항

구분	비밀보장 의무 위반 벌칙	비밀보장 대상
부패방지 권익위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
공익신고 자 보호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 등*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청렴 경기교육, 공익제보

를 통한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 ■ 공익제보란?

공익제보(whistle-blowing)란 말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청렴한 경기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등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그 밖의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7.4.18.)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보호·보상제도 적용대상에 포함

### ■ 공익제보는 이렇게

신고방법 [Hot-line]

- 전화 031) 2490-999
- 이메일 hotline@goe.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 「부조리 신고 및 상담」



## 당신의 용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제도가 지켜드립니다.

### ■ 공익제보자 보호합니다. 안심하고 제보하세요.

#### -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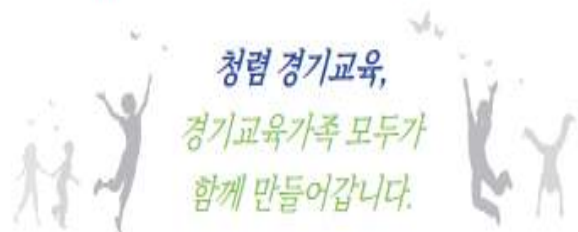
-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 제보와 관련한 위법행위 발견 시 제보자에 대한 책임감면 가능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 제보자에 대한 보상 기준(지급한도액 최대 30억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신고유형	지급 기준액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수수액의 10배 이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추징액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대가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 300만원 이내
그 밖에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부조리 근절을 획기적으로 기여 : 3억원 이내
	부조리 근절에 기여 : 1천만원 이내

- 신고기한 : 부조리행위 발생일부터 3년(횡령·유용은 5년)
-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최종결정된 금액을 지급



공직비리신고(Hot-line)  
hotline@goe.go.kr / 031-2490-999

